OECD 조선협정 국가간 협상결렬로 교섭중단

EC, OECD 사무국의 개선안에 정면으로 반발

지난 2002년부터 추진되어 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선협정 교섭이 국가간 의견대립으로 중단되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9월27일 파리에서 개최된 OECD 조선협정 특별교섭그룹(SNG) 고위층 회합에서 교섭중단이 결정되었다.

덤핑을 규제하는 '선가규율'을 놓고 유럽위원회(EC)와 한국의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 협상재개의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섭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의하면, 금번 회합에서는 사무국이 제안한 비교적 완만한 선가규율안에 대해 EC가 실효성이 있는 엄격한 규율을 강경하게 요구함으로써 협상이 무산됐다는 것이다.

OECD 조선협정의 교섭기한이 금년말로 종료되게 되어 있어 앞으로 1-2개월안에는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한 SNG 의장이 교섭중단을 제안, 각국이 이를 받아들였다.

협상재개에 대해서는 '향후 필요가 생기면 논의를 다시 개시한다'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최근 해운시황 호조에 따른 신조선가의 상승으로 조선시장에 큰 변화가 없는 한 협상재개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OECD 조선협정은 정부의 보조금을 규제하는 '지원규율'과 덤핑을 규제하는 '선가규율'의 2개 골격으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초부터 한국은 선가규율의 도입을 반대해 왔는데, 이는 2002년 10월 경영난에 직면한 조선기업에 대한 보조금 문제로 EC측으로부터 WTO에 제소된 사례가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에 반해 고부가 가치 선박에 생존을 거는 EC측은 엄격한 선가규율을 일관해서 요구해 왔다.

그리고, 일본은 향후 중국 조선기업들의 부각을 감안하여 어떻게든 협정 발효를 실현시키려고 조정역으로서 분주히 노력해 왔다.

일본은 이를 위해 지난 7월 개최된 SNG 회합에서 「모니터링+리뷰+권고」로 구성되는 완만한 선가규율을 제안했으며, OECD 사무국은 일본의 제안을 토대로 이번 회합에서 사무국안을 제안했다.

이 규율안에 대해 한국은 협상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최종적으로 EC축이 이 안에 반발함으로써 협상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OECD 조선협정에 참가한 어느 관계자는 "EC 내부의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교섭결렬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25개국을 껴안아야 하는 EC는 사전에 각국의 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조율해야 하는데, 다수결을 취하기 위해 EC 대표단은 교섭에서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와는 달리 산업계와 정부가 밀접하게 정보를 교환 하는 한국과 일본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OECD 조선협정은 미국의 비준거부로 발효가 불가능하게 된 1994년 협정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추진되는 협정으로서 10년 이상의 대처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조선협정 참여 관계자는 "저선가를 선호하는 나라는 없는데도 선가규율에 대해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리더쉽을 취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